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75-1호)

여론속의 여輿論論

기획: 청소년 SNS 보호,
공감은 높지만 '누가, 어떻게'는 갈린다
- 청소년 SNS 이용과 보호 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

2026. 4. 15.

담당자 김지희 연구원

전화 | 02-3014-6810
e-mail | kim.jih@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선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청소년 SNS 보호, 공감은 높지만 '누가, 어떻게'는 갈린다

- 청소년 SNS 이용과 보호 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

여론 속의
여輿論論

주요 결과

- SNS는 청소년의 일상에서 또래와의 소통, 정보 습득, 자기표현, 문화 참여의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유해 콘텐츠 노출, 과몰입, 정서 발달 저해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호주 등에서 SNS 가입 연령 기준 강화 입법이 추진되는 등 청소년 SNS 이용 문제는 사회적·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논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청소년의 SNS 이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보호 방안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 SNS가 청소년의 과도한 몰입·일상 방해(88%), 정서 발달 저해(86%), 우울감 유발(80%) 등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높고, 또래 유대(73%), 자기표현(67%) 등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매우 동의'는 10% 내외로 적극성은 낮다.
- 청소년의 SNS 이용 역량에 대해서는 자기 조절력(76%), 정보 판별력(71%) 등 4개 항목 모두에서 70% 안팎이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갖추고 있다'는 응답은 20~25%에 그친다.
- 정부 개입 방식으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기업 자율 지원(54%)이 법적 강제·직접 감독(34%)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핵심 보호 주체로는 콘텐츠 제작자(37%), 보호자(36%), 청소년(34%), 정부(31%) 순으로 고르게 분산된다.
- 보호 방안 모두 80% 안팎의 높은 필요성 공감을 얻었으며, 콘텐츠 제작자 책임 강화(89%)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87%)가 특히 높다. 다만 세부 실행 방식에서는 방안별로 선호가 분산되어 구체적 수용성 검토가 필요하다.
- 응답자의 83%가 SNS 가입 연령 제한에 찬성하며 적정 연령 평균은 만 16세, 하루 이용 시간도 83%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며 58%는 '최대 2시간 이하'를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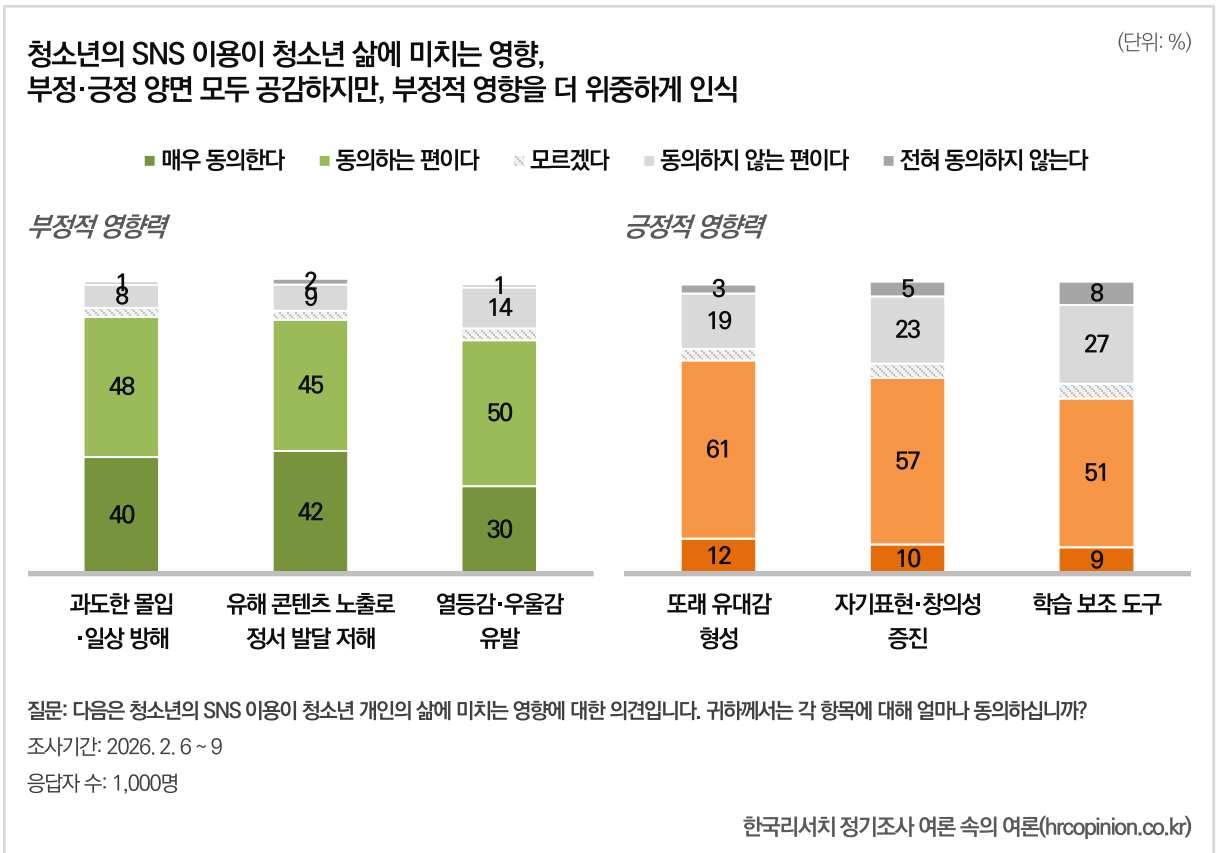
1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한 인식

부정적 우려에 대한 공감도 높고, 긍정적 기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아

SNS 이용이 청소년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다. 과도한 몰입 및 일상 방해(88%), 유해 콘텐츠 노출에 따른 정서 발달 저해(86%), 열등감·우울감 유발(80%)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10명 중 8명 이상이 동의한다. 동시에 또래 유대감 형성(73%), 자기표현 및 창의성 증진(67%), 학습 보조(60%) 등 SNS의 순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는 높은 공감대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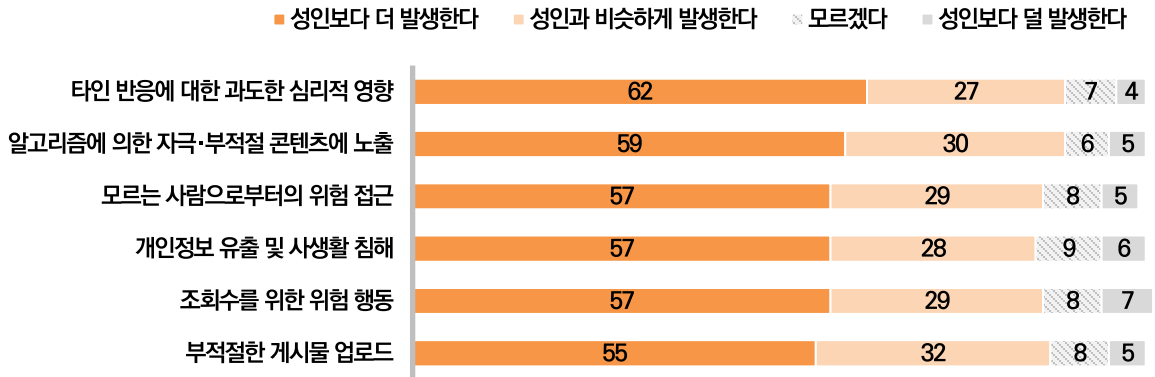
하지만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만 따로 살펴보면 그 인식의 깊이에서 확연한 격차가 확인된다. 정서 발달 저해(42%), 일상 방해(40%), 열등감·우울감 유발(30%)에 대해서는 10명 중 3~4명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반면, 학습 보조(9%), 개성 표현(10%), 유대감 형성(12%) 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는 10% 내외에 그친다. 국민들은 SNS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이 직면하는 부정적 영향을 더 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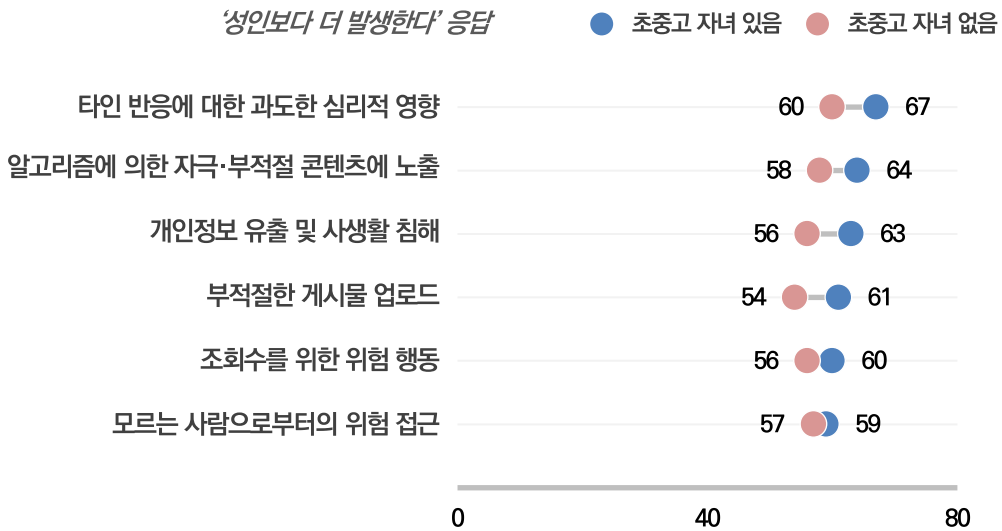
SNS상의 위험 노출에서도 청소년이 성인보다 취약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좋아요'나 댓글 등 타인의 반응에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62%)이 성인보다 빈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알고리즘에 의한 자극적·부적절한 콘텐츠 노출(59%),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위험한 접근(57%) 또한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는 청소년의 취약성을 전체 평균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 반응에 대한 집착(67%)과 유해 콘텐츠 노출(64%) 항목에서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우려를 표한다. 학부모들은 단순한 SNS 이용 행태 문제를 넘어, 플랫폼 환경 자체가 청소년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성인보다 취약하다는 인식, 6개 위험 상황 모두 과반

(단위: %)



초중고 자녀 있는 학부모, 청소년의 위험 노출을 더 심각하게 인식



질문: 다음은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며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상황이 성인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2026. 2.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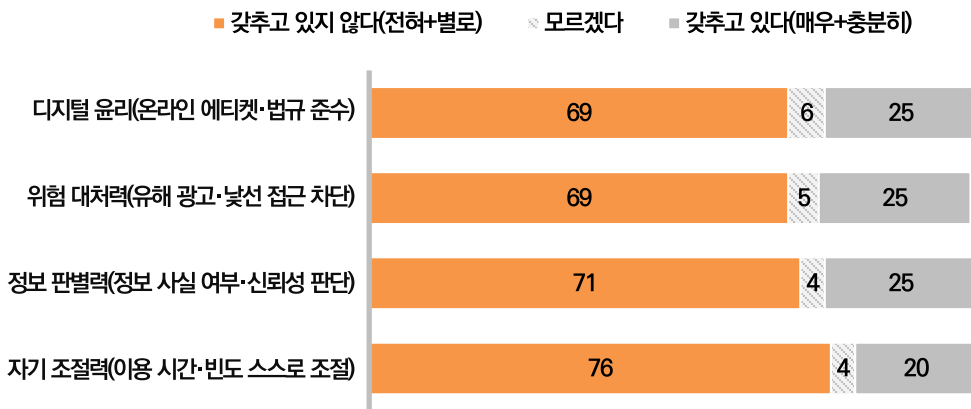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청소년의 SNS 이용 역량,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부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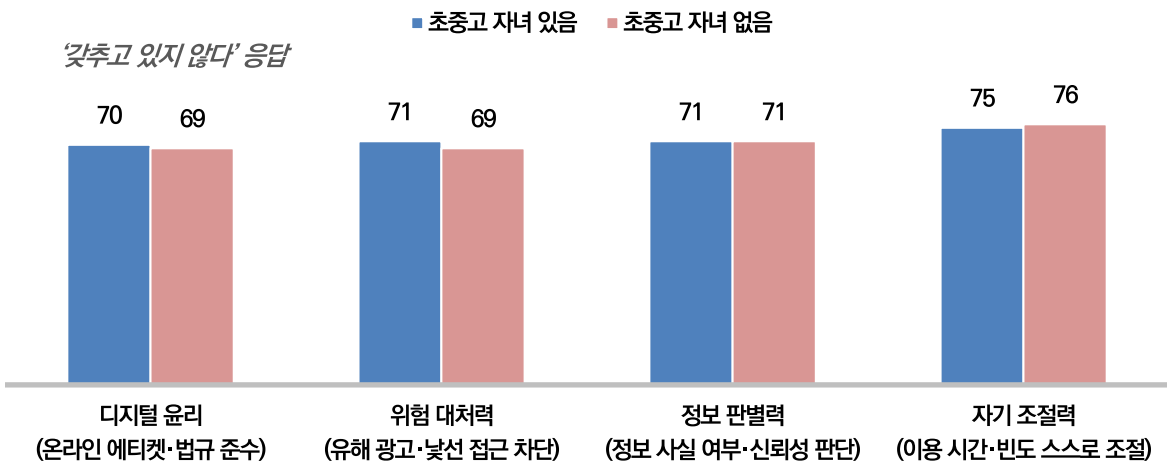
청소년의 SNS 이용 역량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어본 결과, 정보 판별력, 자기 조절력, 위험 대처력, 디지털 윤리 등 모든 항목에서 '역량을 갖췄다'는 응답이 낮다. 특히 청소년이 이용 시간과 빈도를 스스로 제어하는 '자기 조절력'을 갖췄다는 응답은 20%로 4개 항목 중 가장 낮다. 온라인 에티켓과 법규를 준수하는 '디지털 윤리', 유해 광고 및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위험 대처력',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정보 판별력'을 갖췄다는 응답 역시 각각 25% 수준에 머무른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응답도 전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은 스스로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세대를 막론하고 널리 공유되어 있다.

청소년 SNS 이용 역량, 4개 항목 모두 70% 이상이 '갖추지 못했다'

(단위: %)



청소년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청소년의 SNS 이용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우려 공통



질문: 다음은 청소년의 SNS 이용 역량에 대한 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음과 같은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2026. 2.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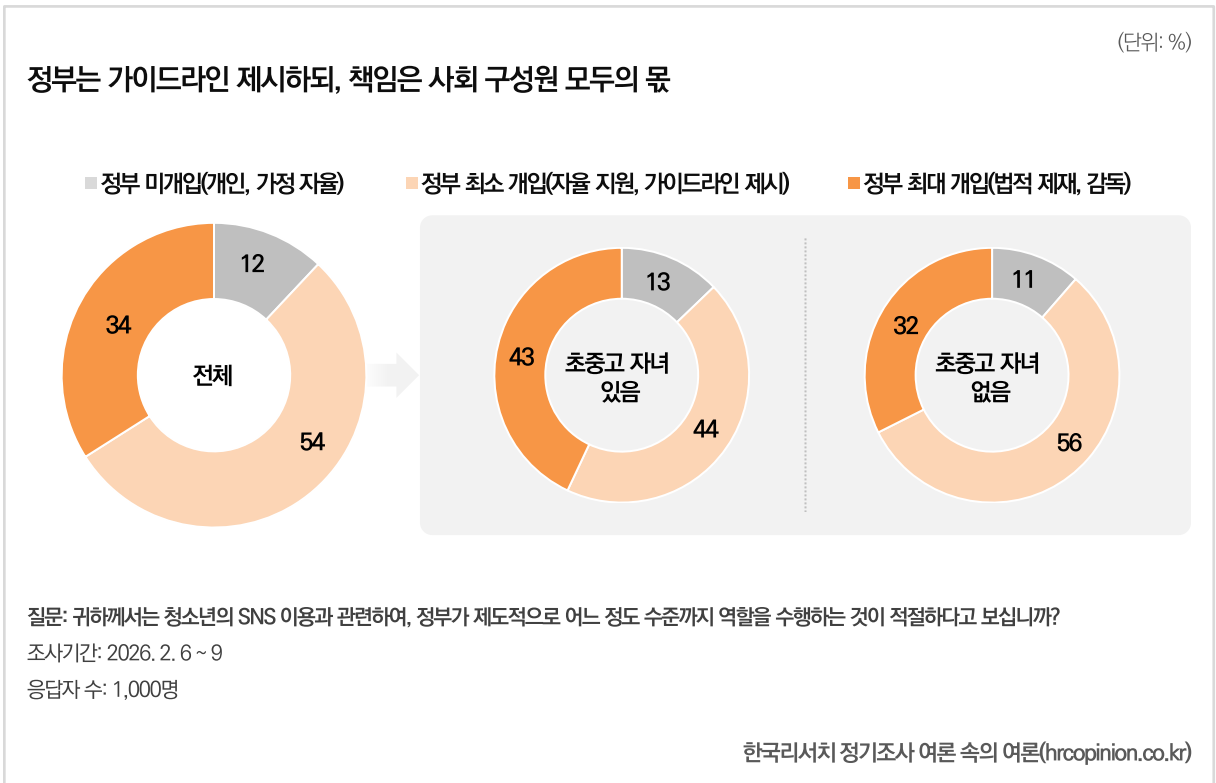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2

보호 및 규제 방안에 대한 인식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하되, 책임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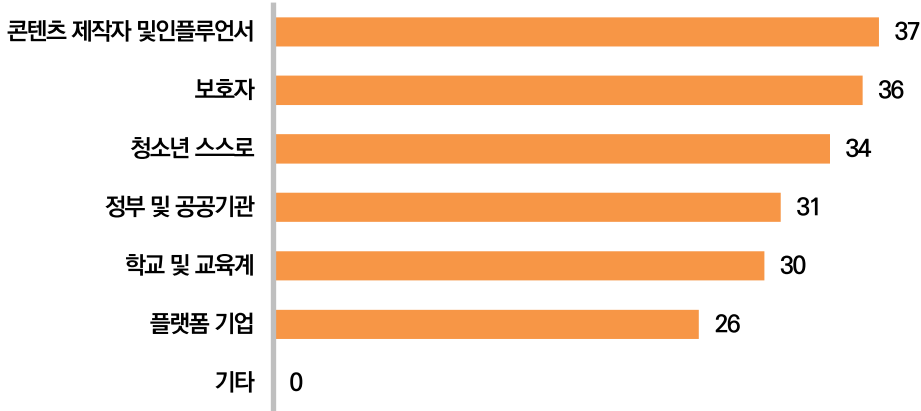
SNS 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는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개입 방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기업 자율 지원(54%)이 법적 강제 및 직접 감독(34%)보다 더 높은 지지를 얻어, 자율 규제에 기반한 점진적 개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44%)와 법적 기준에 의한 강제(43%)를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지지한다. 초중고 자녀가 없는 응답자와 비교할 때, 실질적인 자녀 보호를 위해 제도적 구속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다.



다만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핵심 보호·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다각화된 모습이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SNS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하게 한 결과, 콘텐츠 제작자·인플루언서(37%), 보호자(36%), 청소년 스스로(34%), 정부 및 공공기관(31%), 학교 및 교육계(30%), 플랫폼 기업(26%) 순으로, 모두 26~37% 내외 수준으로 고르게 나뉜다. 뚜렷하게 높은 응답을 얻은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누가 핵심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핵심 보호·관리 주체에 대한 의견 다각화...다층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

(단위: %)



질문: 귀하께서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주체 중 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2순위).

조사기간: 2026. 2.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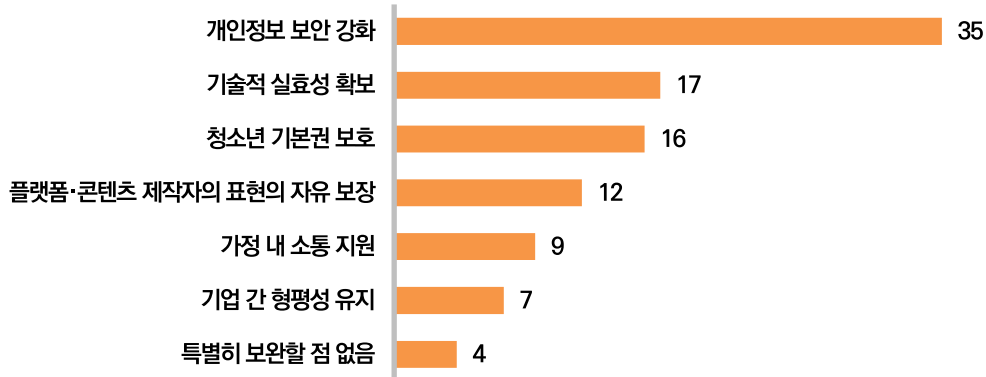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제도 시행 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는 개인정보 보안 강화(35%)가 가장 높으며, 기술적 실효성 확보(17%)와 청소년 기본권 보호(16%)가 그 뒤를 잇는다.

제도 시행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개인정보 보안 강화'

(단위: %)



질문: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청소년 SNS 보호 방안들이 실제로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 1순위 응답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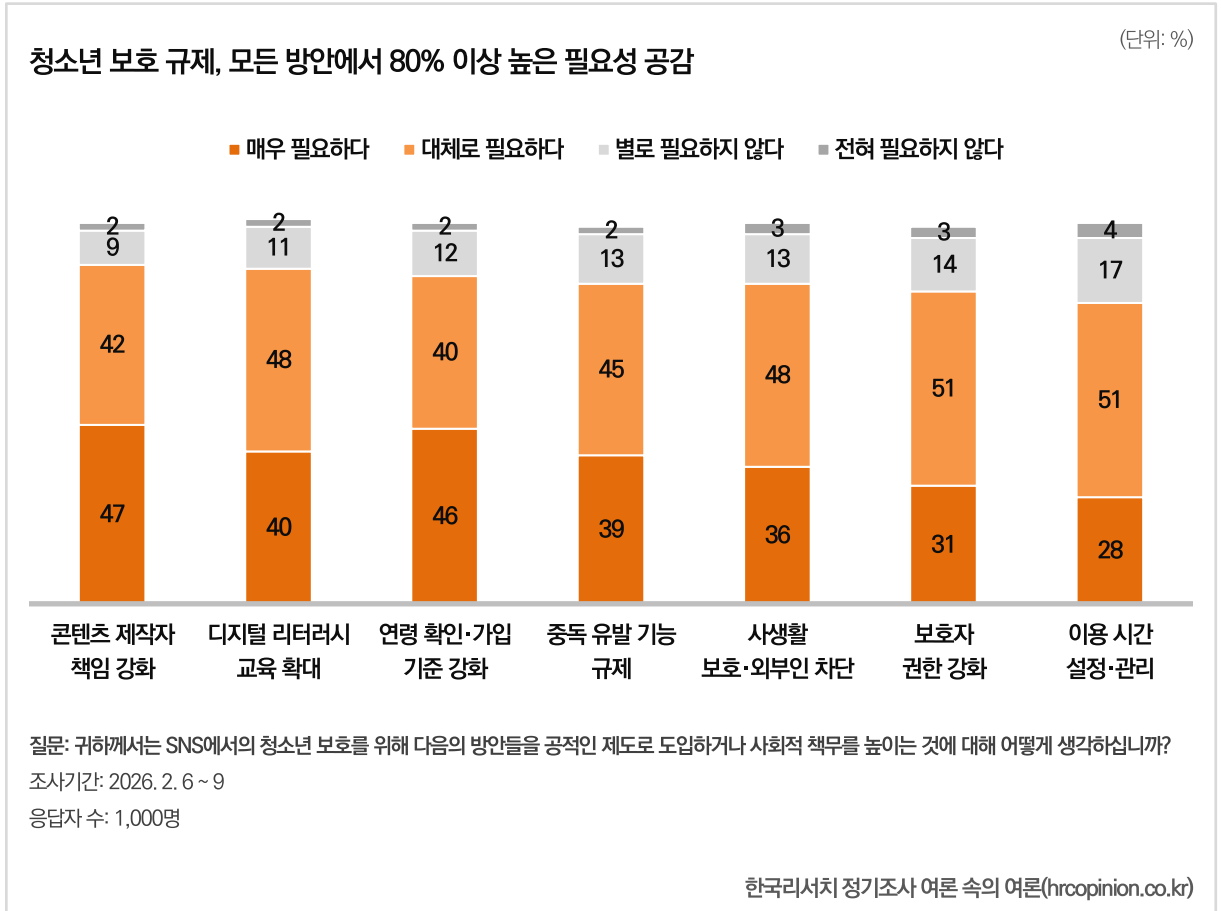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6. 2. 6~9

응답자 수: 1,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규제 필요성에는 높은 '공감', 방법론에는 '의견 분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정책 방안의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80% 안팎으로 동의율이 높다. 콘텐츠 제작자·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89%)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87%)에서 특히 다수가 동의하며, 연령 확인 절차 및 가입 기준 강화(86%), 중독 유발 기능 앱 설계 규제 (84%), 사생활 보호 및 외부인 접촉 차단(84%) 등도 비슷하게 높다. 다만 이러한 높은 동의 수준은 청소년 보호라는 당위적 차원에서의 공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제도 도입 시 수반될 수 있는 비용이나 불편함에 대한 '구체적 수용성'과는 온도 차가 존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각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세부 실행 방식을 물은 결과, 방안별로 선호가 엇갈린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 미디어 교육의 정규화(76%)로 비교적 방향이 뚜렷한 반면, 나머지 방안들은 선호가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는 경향이다.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콘텐츠 제작자·인플루언서 책임 강화의 경우, 위험·자극적인 콘텐츠 알고리즘 추천 배제(51%), 청소년 보호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45%), 적절 콘텐츠에 대한 수익 창출 제한(41%)으로 선호가 나뉜다. 이용 시간 관리 방안의 세부 방식으로는 일일 이용 총량제(67%)와 심야 접속 제한(63%)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콘텐츠 제작자 사회적 책임 강화 세부 방안

(단위: %)



질문: 콘텐츠 제작자 및 인플루언서가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SNS 환경 내에서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콘텐츠 제작자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응답자 886명

디지털 리터러시 및 미디어 윤리 교육 확대 세부 방안

(단위: %)



질문: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윤리 역량을 높여 건강한 SNS 이용을 돕는 데 있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방식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리터러시 및 미디어 윤리 교육 확대 필요 응답자 873명

사생활 보호 및 외부인 접촉 차단 세부 방안

(단위: %)



질문: SNS 환경 내에서 청소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방지하는 데 있어, SNS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다음의 '기본 설정' 중 무엇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사생활 보호 및 외부인 접촉 차단 필요 응답자 841명

보호자의 자녀 SNS 관리 권한 강화 세부 방안

(단위: %)



질문: 귀하께서는 보호자가 자녀의 SNS 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SNS 플랫폼 기업에서 지원해야 할 관리 기능(권한) 중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보호자 자녀 SNS 관리 권한 강화 필요 응답자 828명

비고: 복수응답. 1+2순위 응답 제시. 각 주제별 상위 3개 응답만 제시

조사기간: 2026. 2. 6 ~ 9

연령 확인 및 가입 기준 강화 세부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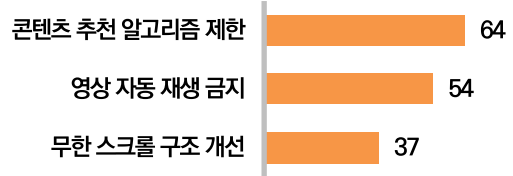


질문: 청소년의 안전한 SNS 가입과 연령 확인을 위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도움이 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순서대로 응답해주세요.

응답자 수: 연령 확인 및 가입 기준 강화 필요 응답자 861명

중독 유발 기능 및 앱 설계 규제 세부 방안

(단위: %)



질문: 청소년의 SNS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독적 특성을 개선하고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는 데 있어, 다음 중 어떤 기능의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중독 유발 기능 및 앱 설계 규제 필요 응답자 843명

이용 시간 설정 및 접속 관리 세부 방안

(단위: %)



질문: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가장 효과적인 것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순서대로 응답해주세요.

응답자 수: 이용 시간 설정 및 관리 필요 응답자 790명

비고: 복수응답. 1+2순위 응답 제시. 각 주제별 상위 3개 응답만 제시
조사기간: 2026. 2. 6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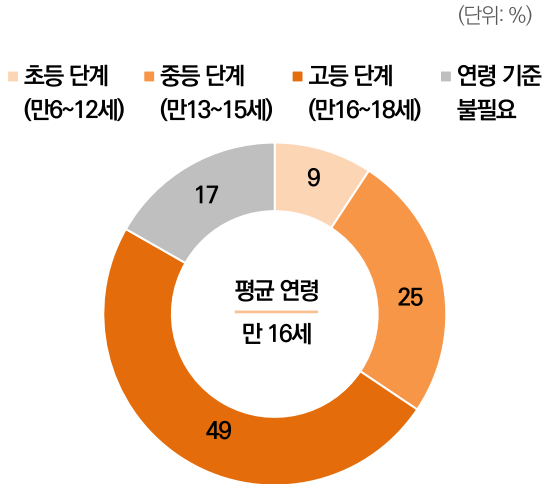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가입 연령은 상향, 이용 시간은 제한하는 방향의 선호 확인

전체 응답자의 83%가 SNS 가입 연령 제한 필요성에 동의한다.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최소 가입 연령은 평균 만 16세이며, 특히 만 16~18세를 선택한 비율은 49%이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기준인 만 14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근 만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호주 등 글로벌 규제 흐름과 유사한 인식이 국내 응답자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하루 적정 이용 시간과 관련해서도 시간 선택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하며, 나머지 83%는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 58%는 최대 2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 SNS 이용에 대해 가입 연령을 상향하고 이용 시간은 제한하는 방향의 '강화된 이용 기준'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응답자 83% '연령 제한' 찬성
적정 연령은 현행보다 높은 '만 1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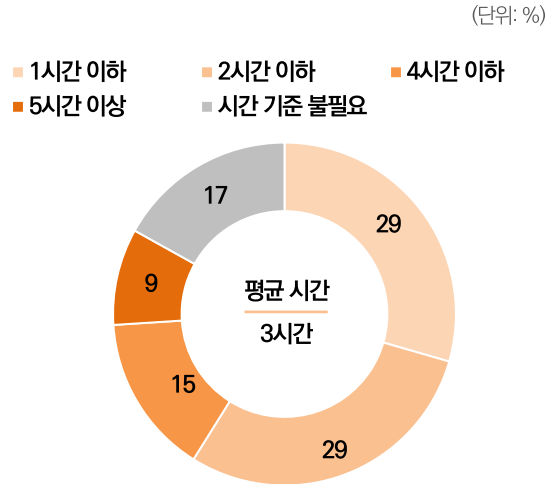


질문: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청소년이 SNS 계정을 스스로 생성하여 이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최소 연령'은 만 몇 세입니까?

조사기간: 2026. 2. 6 ~ 9

응답자 수: 1,000명

**하루 이용 시간 제한 선호 뚜렷
2시간 이하가 절반 이상 차지**



질문: 귀하께서는 청소년의 하루 SNS 이용 시간이 최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시간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1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조사기간: 2026. 2. 6 ~ 9

응답자 수: 1,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단일 규제가 아닌, 역할 분담과 안전장치 설계에 대한 논의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이 위험하다는 우려가 세대를 막론하고 널리 공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강제 제재보다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기업 자율 지원을 선호하는 응답이 우세하다. 또한 보호의 핵심 주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콘텐츠 제작자·플랫폼 기업·보호자·학교·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지 협의가 필요하다. 어떤 제도든 개인정보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제기되었다.

동시에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SNS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공감도가 높았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래 관계 유지, 자기표현, 학습 보조 등 SNS가 제공하는 기회를 보존하면서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응답자의 인식을 측정한 것으로, 어른들의 시각에서 본 청소년 SNS 이용의 현주소를 담고 있다. 실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도 함께 담겨야 할 것이며, 이번 조사가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6년 1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9,958명, 조사참여 1,611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4%, 참여대비 62.1%)
조사일시	• 2026년 2월 6일 ~ 2월 9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